

사회



독감 예방접종 '복새통'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12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민건강증진센터에는 서둘러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대거 몰려 복새통을 이뤘다. 이날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6천191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종플루 불안 ... 독감 백신 맞자”

광주 6천여명 ‘장사진’

신종 플루 불안감으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란(大亂)이 벌어지고 있다. 독감 백신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시민들의 독감 백신 수요는 신종 플루 우려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광주 남구 주민건강증진센터에는 이날 접종 개시 두 시간을 앞둔 오전 7시부터 대기자 행렬이 늘어났다. 이날 각 구 보건소와 동(洞)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65세 이상 등)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 막무가내로 접종을 요구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특히 대기자가 많아 미처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기표를 나눠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날 독감 백신 예방접종자 수는 6천191명이다. 지난 해엔 5천명이었다. 예방 접종 기간은 23일까지다. 이날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독감 백신의 양은 지난해 8만5천명분의 98.8%인 8만4천명분이다.

그러나 실제 독감 백신 확보량은 6천명분이 적은 7만8천 명분(92.8%)이다. 독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한정된 생산라인을 가진 제약사들이 신종 플루 백신 생산을 위해 독감 백신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올해 독감 백신 공급량은 1천100만 명분으로 지난해 1천550만 명분 보다 29% 감소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925) 김종두



‘납품 빚돈’ 입찰브로커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공무원 등과 결탁해 9억5천만원 상당의 관공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2억3천만원을 받아 행인 입찰 브로커 A(48)씨에 대해 알선주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짜고 자재 납품계약을 수주한 B(41)씨와 C(40)씨, 모 군청 공무원 D(45)씨 등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인사 하라” 업자 압박 ‘나쁜 공무원’

“나쁜 공무원” “인사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통해 업자를 압박, 뇌물을 받아 생긴 50대 공무원이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은 12일 직무와 관련, 의료장비 납품 업자에게 금품을 건네 받은 광산구청 직원 K(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중순 자신인 근무하는 구청의 보건소 앞에서 광주 모 의료장비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돈이 적다”며 추가로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올해 초 에이즈 검사 장비 8천700만원 상당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라’며 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자를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

수완지구 정전 논란

수완에너지 “변압기 접속불량 단 6분”

주민들 “최대 2시간 ... 서비스 질 낮다”

최근 택지조성 및 분양을 마친 광주 서광산구 수완지구 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 주민과 수완지구 전기공급을 맡고 있는 수완에너지(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완에너지(주)측은 변압기 접속불량으로 단 6분 동안 정전이 됐다고 밝힌 반면, 각 아파트나 상가 주민 등은 수십 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정전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일부 주민들은 수완에너지의 전화 불통으로 인해 한국전력이나 지식경제부에 까지 호소하는 등 사고대응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완에너지(주)는 광주에서는 최초로 118MW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해 수완지구는 물론 하남2·3지구, 첨단 2단계 등에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이다. 대주주인 경남기업의 자금자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정관리 신청 등 우려적절을 거쳤지만, 현재 9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만 정전은 미처 발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완에너지(주) 측이 임시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각 아파트 단지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완에너지는 자동시스템이 정전을 감지해 곧바로 정상을 되찾았으나, 휴일이어서 각 아파트 단지의 전기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정전 시간이 다소 길어졌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완지구 주민들은 한국전력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비해 사고 대응능력이나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모(55)씨는 “주민들이 정전의 원인까지 파악해 대처할 수 없고 이는 수완에너지(주)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3억원대 유사석유 3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이모(50)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장성군 삼계면의 농공단지에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10만ℓ (3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광주지역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

경찰 고위직 ‘호남 왕따’ 노골적

행안위 국감, 현 정부서 경무관 승진 단 1명 ... 영남 출신은 9명

총경 승진도 22% 그쳐 비중 급감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간부 인사에서 ‘영남 편중’ 및 ‘호남 소외’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가 단 한 명에 그치는 등 경찰 고위직에서의 ‘인맥 고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총경 이상 승진자 146명 중 영남권 출신은 63명(43.2%)에 달했다.

이는 2006~2007년 영남 출신 간부들의 승진 비중(34.2%)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승진한 간부 10명 중 4명 이상은 영남 출신이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경찰의 별’인 경무관 승진자가 전체 21명 중 42.9%(9명)에 달했고, ▲총경 43.2%(54명) ▲경정 35.9%(52명) ▲경감 30.7%(88명) ▲경위 32.3%(213명) 등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간부 승진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이후 호남의 총경 이상 승진자는 19.9%(29명)로,

2006~2007년 24.5%(4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호남은 지난해 이후 경무관 승진 비중이 4.8%(1명)에 그쳐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의 퇴보가 두드러졌다. 현 정부 직전 호남 인사의 경무관 승진이 18.8%(6명)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 후 고위직 승진 비중이 4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한 셈이다.

호남은 또 지난해 이후 ‘경찰의 꽃’인 총경을 단 인사 전체의 22.4%에 그쳐 2006~2007년(25.7%)보다 승진 비중이 급감했다.

이윤석 의원은 “인구 점유율이 26.1%에 불과한 영남 출신이 현 정부 출

범 초기인 2008년 인사에서 경무관 승진자의 50%, 총경 49.1%, 경정 42.3%를 차지한 것은 조직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영남 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경찰청별 인사 소외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2004년 이후 경무관 승진자 79명 중 경찰청 소속이 36명(45.6%), 서울청은 35명(44.3%)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며 “서울과 지방 근무자의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남·제주지역 법원 공무원범죄에 관대”

인신구속형 10% 수준

호남과 제주지역 법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지법들은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33명에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했다.

이는 전체 기소 공무원의 10.8% 수준으로, 전국 평균(17.4%)을 크게 밑돌았다. 법원별로는 제주지법이 5.6%로 가장 낮았고, 전주지법(6.9%), 광주지법(13.4%) 등이었다.

또 광주고법 관할 법원들의 집행유예 선고율도 타 지역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각각 44.8%, 38.9%로, 전국 평균(37.7%)을 크게 웃돌았다.

전주지법(31.7%)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로, 전국 평균(6.

6%)을 크게 상회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구속비율 역시 광주지법 17.6%, 전주지법 26.3%로 나타나 전국 평균(32.6%)보다 비위 공무원 구속 건수가 적었다. 한편 이 기간 공무원 범죄 처리건수는 광주지법 187건, 전주지법 89건, 제주지법 30건 등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러시아' (Eye Laser Asia) featuring eye care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062-674-1199),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산水土風' (Samsu) featuring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0621434-0001), and a list of services.